



서장

‘일본=기지국가’론의 제기



1. 평화국가의 이상과 현실

1) '평화국가'의 이상

일본의 '전후체제(戰後レジー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질문은 이른바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을 연구하는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한 탐구다.

1990년대 이래 일본의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기 전까지 많은 일본 전문가는 일본을 통상국가(Trading State)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小泉) 내각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개혁 이래 오랜 구조조정 중에 있으며, 표준화와 경쟁이 도입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경제운영에서의 일본적 방식, 즉 일본형 시스템의 포기로 간주되고 있으며, 경제적 의미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란 다분히 군사 안보적 의미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이는 보통의 군사국가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등 주변 아시아 국가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이미 충분히 '군사국가(Military-State)'였으며, 군사대국으로의 야심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늘 군국주의 부활의 가능성을 내포한 국가로 비치고 있었다.¹

반면 일본인 일반은 좌파적 시각과 우파적 시각의 차이를 초월해서

자국을 '평화국가(Peace-State)'로 정의(identify)해 왔다. 그 근거는 전쟁 및 무력 사용의 포기과 군사력 및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존재였다. 이에 비춰 보면 전후 일본은 분명 군사국가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헌법 제9조를 들어 이를 근대민족국가의 결격 사유로 간주하는 일본의 우익 국가주의자들은 헌법을 개정하고 '평화(치매)국가' 일본을 군사적으로 정상화하여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헌법 제9조를 근대 이래 일본이 창출한 최고의 인류적 가치로 간주하는 평화주의자들은 현행 헌법을 고수하고 '평화국가'를 재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파에나 우파에나 일본은 '평화국가'인 것이다. 한쪽은 이를 바꾸자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이를 지키자는 것이다.

과연 일본은 진정 '평화국가'인가? '평화'라는 추상명사는 정치적 이상주의자라면 누구나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말일 텐데, 과연 이 명사는 진정 전후 일본 국가의 본질을 규정하는 수식어로 어울리는 것인가? '정치적 이상주의란 때때로 불쾌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통찰만큼이나 이상주의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드물 테지만,² 전후 일본 외교의 이념과 현실을

1 한국인이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인식하는 태도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인 일반이 일본의 이미지로 선택한 주제 가운데 '평화주의'는 8.8%에서 5.3%로, 그리고 다시 4.2%로 줄어든 반면, '군국주의'는 50.3%에서 53.1%, 그리고 다시 56.9%로 늘었다. 「제1~3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결과 보고서」(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306251911157.pdf;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4071614504448.pdf;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506151483473.pdf(최종 검색일: 2015. 7. 10)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politics, idealism is frequently no more than an excuse for not recognizing unpleasant realities," Hannah Arendt, *Crises of the Republic*.

아렌트에 의거하여 표현하자면,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 이미지, 즉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이상이란 국민의 시선을 불쾌한 현실로부터 돌리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불쾌한 현실'이란 '미국의 기지가 되어 버린 국가'라는 현실이었다. 일본 국민이 '기지국가'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화국가'의 이상에 일본 국가의 기본 이념이 배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한 스스로의 정부가 전개하는 대외정책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³ 그럼에도 전쟁도 평화도 아닌 냉전의 어정쩡한 현실은 전후 일본 외교의 애매함을 오히려 미덕으로 보이게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냉전의 종결은 일본 외교의 이상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일본인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걸프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냉전의 종결이 곧바로 평화로운 세계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반면 미소 대립의 냉전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침략자 비난의 국제적 합의'가 유엔안보리에서 이뤄짐으로써 집단안전보장에 대한 소박하고도 낙관적인 믿음이 국제사회를 사로잡게 되었다.

여기서 냉전 종결 후 일본의 움직임이 주목되었다. 일본은 국제사회가 일본에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으며, 국

Lying in Politics, Civil Disobedience, on Violence, Thought on Politics and Revolu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p. 228 (ハナ・アーレント, 『暴力について』, みすず書房, 1973年, 212頁). 요네하라 겐(米原謙)의 연구를 통해 아렌트의 문장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 둔다. 米原謙, 『日本的「近代」への問い—思想史としての戦後政治』, 新評論, 1995年, 31頁.

3 일본 외교 이념의 혼란에 대해서는 栗野鳳, 「戦後日本外交の思想」, 日本國際政治学会(編), 『日本外交の思想』(國際政治, 71卷), 1982年 8月, 160-172頁 참조.

제공헌의 방식과 내용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나는 종래의 '평화국가' 이념을 더욱 철저히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 온 '평화국가'의 이념이야말로 냉전 이후 세계질서 구상에서 더욱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국가' 노선이 냉전하에서 일본이 '일국 평화주의'를 추구할 수 있었던 특수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노선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가라시 다케시(五十嵐武士)의 '제2의 평화국가(平和国家・パート・ツー)'론이며,⁴ 후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보통국가'론이었다.

여기서 '보통국가'란 '국제사회에서 당연시되는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서 행하는 국가'로 개념화되었다. '당연한 것'이란 군사력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안전보장의 세계에서 군사력을 포함한 국제협력을 행한다는 것이었다. 걸프전쟁에서 일본은 총액 130억 달러의 재정지원과 약간의 문민 활동을 약속하여 이를 실시한 바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쿠웨이트 정부가 미국의 한 유력 신문지상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여 세계 각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그런데 광고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에 따른 충격이 '보통국가'론 대두의 배경이 되었다.

한편 전후 평화주의의 연장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제2의 평화국가'론은 유엔과 지역안전보장에는 적극적으로 참가 협력하지만, 그 수

단은 군사적인 하드 파워가 아닌 비군사적인 소프트 파워에 한정해야 한다는 외교안보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걸프전쟁 후 페르시아만에 남아 있던 기뢰 소해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소해정을 파견했다. 일본의 소해정이 일본 영해를 벗어나서 활동한 것은 한국전쟁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 당시 활동했던 일본 특별소해부대의 존재가 일반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아사히신문』에서는 '역사의 공백'이었던 그 존재에 관해 조명하기도 했다. 자위대의 해외파견이라는 현실이 전후 평화주의자에게 안겨 준 위기감이 '제2의 평화국가'론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형 외교의 핵심에서 '평화국가'가 국시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믿는 일본의 많은 논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이 주변국들의 충분한 이해를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전후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나는 혼란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군사적인 수단이 '평화국가'라는 방침에 저촉함으로써 생기는 안전보장상 특유의 딜레마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의지로서의 '평화국가'의 형성, 구조, 전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⁵

이가라시 다케시는 '평화국가'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 "1. 일본국 헌법 제9조에 전쟁포기를 규정함으로써 '평화국가'의 이념이 성립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이 '요시다 독트린'하에서 일본 본토의 군사기지를 미국에 제공하고, '군사력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힘'으로서 경찰예비대(National Police Reserve)를 합헌으로 해석한 이래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평화국가'의 이념에서 괴리된 모습을 보였으나, 3. 그

4 五十嵐武士, 「『平和国家』という視点」, 『日米関係と東アジア—歴史的な文脈と未来の構想』, 東京大学出版会, 1999年, 251-268頁.

5 同上, 151-152頁.

럼에도 일본을 '평화국가'로 보는 자아인식이 일본인 사이에서 정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요인으로는 '평화국가'가 안전보장정책과의 사이에서 모순을 일으키면서도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데올로기와 운동, 정책이라는 세 부분으로 분극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부구조를 완성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첫째, 여론 속에서 확인되는 체제 이데올로기, 둘째, '평화국가'의 이념을 환기하는 여러 수준의 운동, 셋째, '평화국가'의 이념에 기초하는 안전보장정책상의 대항적 제안 등이다.⁶ 이는 각각 '평화주의', '평화운동', '평화3원칙'으로 바꿔 이해해도 될 것 같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평화국가'가 '현실을 제어하는 이념'으로 신봉되었다기보다 한편으로는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체제 이데올로기로 바뀌어 '현실을 덮어씌워 감추는 이념'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이념'이 되고 말았다는 데 있다.

2) '기지국가'의 현실

그 현실이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다름 아닌 '기지국가'였던 것이다. '평화국가'는 물론 '무장국가', '국방국가', '병영국가'는 아니며, 이들의 대항 개념으로서 사용되면서 개념화한 것이었으나 '기지국가'라는 현실과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었다. 이가라시는 일본 정부가 '평화국가'로서 그 나름의 의지를 지니면서 그에 걸맞은 외교정책을 전개하려 했다는 점을 평가하여 이를 '일본형 외교'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 즉, '평화국가'의 개념이 '미국형 외교에 안전보장을 위

임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형 외교에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임했다는 것, 이 현실이 바로 '기지국가'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평화국가' 외교구상의 핵심인 '종합 안전보장'이나 그 수단인 '정부개발원조(ODA)' 등은 '기지국가'라는 현실에서 가능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본형 외교가 냉전 종결 후 1991년 걸프전쟁을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군사적인 위협을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억제적인 '평화국가'의 방침에서 탈각하여 적극적으로 평화를 송출하는 능동적인 형태의 '평화국가'가 될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었다. 자위대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참가는 그러한 요구에 응하려는 '일본형 외교 개정판'의 하나였다.⁷

2001년 9.11 동시다발 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간 침공과 그에 이은 이라크전쟁에서 일본은 다시 안보정책의 전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기지국가'의 현실 속에서 일본은 곡예와 같은 안보정책을 전개하고 있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평양 방문 직후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은 거세졌고, 군사동맹의 어감을 풍기는 '미일동맹'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납치' 문제로 촉발된 북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경계심을 배경으로 일본은 군사적 '보통국가'의 길을 재촉했다. 2010년 일본은 중국에 경제대국 2위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같은 해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연안에서 벌어진 중국 선박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충돌 사건이 일본 국민의 안방에 중계되었고, 이는 일본 국민에게 중국의 위협을 각인시켰다. 이

6 同上, 152-162頁.

7 同上, 176頁.

러한 변화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군을 보유하여 '전후 레짐으로부터 탈각'할 것을 주장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본격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바야흐로 '기지국가'는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운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베 내각이 헌법개정으로 가는 전 단계로 현행 헌법하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각의결정을 내리고, 법제화를 서두르자 이에 대한 저항이 조직화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지형 속에서 '기지국가'는 오히려 그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기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보통국가'의 완성을 꿈꾸는 아베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전후 일본이 걸어온 '평화국가'로서의 족적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2015년 4월 22일 반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수상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베 수상은 "지난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 '평화국가'로 걸어온 자세는 앞으로도 불변할 것"이라 대응했다.⁸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아베 수상의 이 발언을 뒷받침하듯이 2015년 6월 16일 '일본의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족적'이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물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했다.⁹ 영상물은 일본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 러시아어, 한국어의 10개 언어로 시청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보통국가화 노선에 앞장 서 있는 쪽에서 '평화국가'를 치켜세

8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a_o/c_m1/cn/page4_001136.html(최종 검색일: 2015. 7. 10)

9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p_pd/pds/page22_002004.html(최종 검색일: 2015. 7. 10)

우는 반면, 그동안 헌법 제9조의 가치를 소중히 해 온 평화주의자 그룹에서 '평화국가'에 대한 회의론이 튀어나왔다. 전후 '민주주의적·세계적 입장'에 서서 '과학적 역사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역사학연구회'가 전후 70주년 성명 '전후 70년을 맞이하여 전쟁으로의 길에 반대하고 평화로의 결의를 새로이 하는 결의(戦後70年を迎え、戦争への道に反対し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決議, 2015. 5. 23)'를 발표하고, 전후 일본이 결코 '평화국가'라 불릴 수 없는 체제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일본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많은 미군기지를 두고 있으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미군의 출격거점이 되어 왔던 국가를 '평화국가'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¹⁰ 이런 뒤돌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기지국가'론을 주장하는 의의가 있다.

2. 기지국가론의 제기

1) '기지국가'의 정의

'기지국가'라는 말은 본래 미군의 기지를 안고 사는 국가라는 의미에서 일본의 좌파 저널리즘 용어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일본공산당 계열의 연구자 마쓰타케 노부유키(松竹伸幸)와 야마네 다카시(山根隆志) 등이 이 용어를 사용하여 일본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¹¹

10 일본 역사학연구회(歴史学研究会) 홈페이지, <http://rekiken.jp/appeals/appeal20150523.html>(최종 검색일: 2015. 7. 10)

11 高橋市, 「基地国家日本の検討—開戦の現状とその展望(座談会)」, 『社会主義』 69卷,

마쓰타케 노부유키의 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선행연구 소개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기지국가’라는 용어는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으며, 학술적 분석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기보다는 일본에 미군기지가 비정상적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용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일미군 기지가 일본 국민 일반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된 것으로,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거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미군기지의 설치와 미군 주둔이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면서 일본 국민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기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평화헌법이 점령 당국, 즉 미국에 의해 강요되었으면서도 일본 국민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정착되었다는, 평화헌법의 양면성과 쌍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기지국가’라는 용어를 이러한 양면성을 드러내기 위한 분석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개념 규정을 시도하여 정의를 내리고, 그와 비슷한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지국가’란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써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국방의 병력’, 즉 국방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전후 국가가 평화헌법이 규정한 제약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국의 안전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의 의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지국가’에는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모순이 동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기지국가’는 ‘세계전쟁의 시대’였던 20세기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가 선택한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일본만의 독특한 생존방식을 표현하는 특수개념이다. 그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필수요건 중의 하나인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첸스타인(Peter J. Katzenstein)이 개념화한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²

그러나 ‘기지국가’란 단순히 ‘일본이 외국의 군대에 기지를 제공하고 주둔군의 존재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된 용어다. 그것은 일본이 이행해야 할 기지제공의 방식이 이른바 ‘전토기지방식(全土基地方式)’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이 그 당시 일본 이외의 나라들과 체결해 왔던 군사행정협정과는 크게 다른 점이였다. 예컨대 ‘미영기지대여협정(1941)’이나 ‘미-필리핀 군사기지협정(1947)’에는 영국이나 필리핀이 미국에 대해 대여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기지들은 양국 영토의 ‘제한된 지점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1952년 2월 28일에 체결되고 4월 28일 발효된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하여 성립한 미일행정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제공해야 할 시설 또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이라는 주권국가의 전 국토를 군사작전을 위한 잠재 구역으로 설정한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전토기지방식’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일본의

1957年 5月; 松竹伸幸, 『基地国家・日本』の形成と展開, 新日本出版社, 2000年; 山根隆志, 『基地国家・日本』と安保の構造, 『前衛』873号, 2011年 8月.

12 Peter J. Katzenstein, *Policy and Politics in West Germany: The Growth of a Semisovereign State*,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1987, pp. 5-10.

영토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모의 군대를 보유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¹³

이상이 한국전쟁 기간 중에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일본에 성립한 국가의 현실을 '기지국가'로 보는 이유다. 1947년 5월 제9조에 '전쟁포기'를 명기한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어 '평화국가'로서 재기할 것을 다짐한 지 5년 만인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고,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일본은 '기지국가'가 되어 독립했던 것이다. 나아가 미일행정협정에서 채택된 '전토기지방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본적인 발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나토 지역 내에서의 미군 주둔이 공동방위체제 안에서의 주둔이었던 데 비해 일본에서의 미군 주둔은 기지제공 또는 주둔군 협정이라는 제도 속에서의 미군 주둔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나토 지역 내의 실제 미군 주둔을 보더라도 서독이라는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조약 체결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소규모였으며, 국토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¹⁴

그렇다면 미군 주둔이 자국의 안전보장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독일의 경우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집단적 방위체제 안에서 국제공헌 일환의 위치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다르다.¹⁵ 즉, 안전보장의 일

차적 책임을 지는 자국 군대의 유무와 그 사용의 한계 문제다. 일본과 독일의 대비에서 보이는 일본의 특이성은 일본과 한국의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3조에서, 양국은 그 한쪽이 받게 될 군사적 공격을 양국에 대한 공동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전토기지화'의 상황에 있었으며, 그 기지는 실질적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3년 1월 현재 약 49만 명 규모로 증강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반도 이외의 광역적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⁶

2) '기지국가'의 모순

이러한 '전후 국가'의 반주권적 성격은 일본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규정하고, 기지국가의 경제, 즉 기지경제는 전후 일본 경제부흥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사회의 이율배반적 대미 인식을 낳은 핵심 요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 즉, '기지국가'적 성격은 전후 국가 일본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그런데 '기지국가'와 '평화국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은 '기지국

13 明田川融, 『日米行政協定の政治史—日米地位協定研究序説』, 法政大学出版局, 1999年, 7頁.

14 Simon W. Duke and Wolfgang Krieger (eds.), *U. S. Military Forces in Europe: The Early Years, 1945-1970*,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3, p. 6; 明田川融, 前掲書, 서론의 註13, 19-20頁 참조.

15 大嶽秀夫, 『二つの戦後—ドイツと日本』, 日本放送出版協会, 1993年, 151-153頁.

16 이삼성, 「한국전쟁이 냉전과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전통적 시각과 비판적 시각의 비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전쟁과 남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학교출판부, 1991, 65-67쪽.

가'였기 때문에 '평화국가'일 수 있었으며, '평화국가'이고 싶다는 지향이 '기지국가'의 현실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두 개의 규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평화국가'의 대치 개념은 물론 '국방국가'일 것이다. 그러한 관계에서 보면 '기지국가'는 아직 '평화국가'가 되지 못했으며, 이미 '국방국가'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20세기 후반의 냉전시대에 일본에서 탄생한 특이한 국가형태였다. 따라서 '기지국가'의 내부에는 '평화국가'로 이행하려는 계기와 '국방국가'로 회귀하려는 계기가 공존하며 서로 갈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지국가'를 해체하려는 이 두 움직임에 대한 반발에 따라 '호헌 평화주의'와 '전수방 위론' 간의 끌어안기가 성립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어 왔다. 이러한 불안정한 끌어안기가 '기지국가'를 유지시킨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지국가'와 '평화국가'는 상호 배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전후의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는 현실을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이상을 표상하며, 현실과 이상의 동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즉, '기지국가'의 현실 위에 '평화국가'의 이상이 덧씌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전후 일본의 현실이 '평화국가'의 이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구성주의적 일본 이해와 다른 방식으로 일본에 접근한다.¹⁷ '평화국가'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기저에

있는 현실로서의 '기지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변하지 않고 정착 강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지국가'론의 제기는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 인식론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지국가'는 언제 탄생하여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이 책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 전쟁과 독특한 형태로 관계를 맺으면서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로서의 존립과 유지를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다.

3. 선행연구, 자료, 책의 구성

1) 선행연구

한국전쟁과 일본의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연구들이다. 와다는 한국전쟁 개전 40년이 되는 1995년 『한국전쟁(朝鮮戦争)』을 출판하고,¹⁸ 이를 발전시켜 2002년 『한국전쟁전사(朝鮮戦争全史)』를 출판했다.¹⁹ 이들 연구에서 와다는 한국전

17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한 구성주의적 이해는 다음을 참조. Peter J. Katzenstein, *Cultural Norms and National Security: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New York: Cornell Univ. Press, 1996. (ピーター·J. 카츠ェンスタイン, 『文化と国防—戦後日本の警察と軍隊』, 日本経済評論社, 2007년) 또한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한 구성주의자들의 이해에 동의하면서도, 미일동맹이 평화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을 현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일정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미야시타 아키토시의 연구도 참조할 것. Akitoshi Miyashita, "Where do Norms Come From?:"

Foundations of Japan's Postwar Pacifism,"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7, 2008, p. 116.

18 和田春樹, 『朝鮮戦争』, 岩波書店, 1995년. (와다 하루키,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1999)

19 和田春樹, 『朝鮮戦争全史』, 岩波書店, 2002년. 이 책은 이후 영어로 번역되었다(*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4).

종장

‘기지국가’의 탄생과 그 함의



1. 요약

1) 동아시아 냉전에서 일본의 위치

한국전쟁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보면 일본을 둘러싼 미소 간의 힘겨루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¹ 이른바 극동 코민포름이라는 기관의 존재 유무를 둘러싼 논쟁은 일본을 둘러싼 미소 대결의 구도를 밝히는 과정에서 소련 측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결국 ‘극동 코민포름’이라는 명칭의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렇다고 이 점이 스탈린의 동북아시아 정책이 적극적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논거는 되지 못한다. 스탈린은 1950년 1월 6일 코민포름을 통해 일본공산당을 비난하며 적극적인 대미투쟁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을 자국의 기초적인 군사 산업기지, 극동에서의 군사적 모험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고, 일본 인민을 미 제국주의자의 육탄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스탈린에게 1949년 말 일본에서의 사태 전개는 미국에 의한 일본의 ‘기지국가화’로 비쳤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역할을 일본공산당에 기대했던 것이다.

한편 동북아시아는 1948년의 남북 분단정권 수립,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등의 사태 전개와 이에 대응한 일본점령 정책의 ‘역코스’로의 전환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분단국가’를 사이에 두고 ‘혁명국가’와 ‘기지국가’가 대치하고 있었다. ‘혁명국가’ 중국은 ‘기지국가’ 일본을 발판

1 饒庭孝典・NHK取材班,『朝鮮戦争—分断38度線の真実を追う』,日本放送出版協会, 1991年, 214頁.

으로 한 미국의 간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며, 미국은 '혁명국가' 중국으로부터 전파되는 혁명의 물결을 '기지국가' 일본이 막아 주기를 기대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소 간 힘겨루기는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를 포함하여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1950년 1월부터 일단의 구 일본군 장교들이 타이완으로 건너가 장제스(蔣介石)의 '대륙반공(大陸反攻)'을 지원하기 위해 '백단(白團)'이라는 이름으로 비밀공작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 백단이 일본에서 타이완으로 건너간 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선족 부대의 파견을 둘러싸고 조중 간에 교섭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를 허락하여, 4월과 6월 2회에 걸쳐 중국 대륙으로부터 북한으로 조선족 부대가 대거 이동했다. 대륙의 조선인들이 전투 태세를 정비하고 있는 동안 일본의 조선인들은 「코민포름 비판」에 힘입어 적극적인 혁명운동의 선두에 나서려 하고 있었다.

이로써 과거 중국 대륙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해 온 일본, 중국, 조선의 3개 민족 병사와 장교들은 이제 한국전쟁 발발을 앞두고 한편에서는 일본에서 타이완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대륙에서 한반도로 건너가 또 다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한편은 '대륙반공'을, 다른 한편은 '혁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미중전쟁으로 전화되기 전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중일전쟁의 대립구도가 부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일본 재주 조선인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전투적이었던 일본의 재일조선인 조직인 조련이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해 해산되면서 스탈린은 직접 일본공산당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스탈린의 눈에는 일본공산당이 이러한 사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유효한 저항을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코민포름의 일본공

산당 비판은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2) '기지국가'의 전쟁

일본은 한국전쟁 전 기간을 통해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가 되었다. 그 결과 1953년 1월 31일 현재 일본 국내 733곳에 미군기지가 전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² 그 면적은 14만 560정보로 일본 전 국토 면적의 약 0.378%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한 후에 오히려 미군이 직접 소유한 군사기지는 증가했다. 또한 해상 훈련장이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산재해 있었다. 일본 수산청 조사에 따르면 1953년 2월 현재 방잠망과 해저 장애물까지 포함하면 항만과 해안의 미군 시설은 총 76개, 수역 면적으로 4만 8,000km²에 달했다. 이는 규슈에 필적하는 면적이었다. 이들 기지는 원칙적으로 무기한 접수였으며, 더욱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무한 확대가 가능했었다. 미일시설구역협정은 1952년 7월 26일에 중합협정을 체결한 뒤 1년 동안 11회나 개정되었으며, 그 기간에 접수한 건수는 14건, 훈련장과 비행장 등을 합쳐 47개소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일행정협정에서 '전토기지방식'이 채택되어 있는 데 따른 결과였다.

주일미군 기지는 한국전쟁의 전 기간을 통해 첫째, 출격기점으로서의 전진기지로서, 둘째, 물자 및 병사 수송을 위한 중계기지로서, 셋째, 수리 및 조달을 위한 보급기지로서, 넷째, 훈련과 휴양을 위한 후방기지

2 木村禎八郎(他),「朝鮮戦争と日本経済の軍事化」,『講話からMSAへ』(日本資本主義講座—戦後日本の政治と経済, 第2巻), 岩波書店, 1953年, 149頁, 167頁.

로서의 역할이 주어졌으며, 총체적으로 전 국토가 그대로 '전투기지'가 되었다.

일본의 기지로부터 한반도로의 미군기 출격 횟수는 공군이 72만 980회, 해병대 공군이 10만 7,303회, 해군의 항공모함 발진이 16만 7,552회로 이를 모두 합치면 약 100만 회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투하한 폭탄, 네이팜탄, 로켓탄의 총량은 공군이 47만 6,000톤, 해병대와 해군기가 22만 톤 등으로 모두 합쳐 약 70만 톤에 이르는 것이었다.³ 또한 개전 당초 주일미군은 약 12만 5,000명이었으나 최대 시 연인원은 35만 명에 달했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을 통과해서 한반도의 전선에 투입되었다. 전력과 교통, 통신 부문 등 일본의 각종 공공시설과 민수사업의 군사 이용이 증가했으며, 특히 수송 부문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 전국 각지의 벽지에까지 닿아 있는 일본의 국철은 일본이 수송 중계기지가 되기 위한 기초 조건이었다. 이들 철도가 실어 나른 것은 병력만이 아니었다.

1950년 8월 요코하마(横浜)에 병참사령부가 설치되면서 한반도의 전선에서 사용되는 탄약을 비롯한 대량의 전쟁물자는 모두 미 본토와 기타 각국으로부터 일단 일본의 주일미군 탄약고 및 보급창에 납품, 보관된 뒤 작전에 응한 계획적인 보급이 행해졌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에 대한 자동차, 중기갑차, 중차량, 철도 차량 등의 서비스, 선박수리 관계 서비스 등 이 방면의 군수생산 요구가 급증했으며, 기타 탄약고의 운영, 무기(특히 소총과 박격포 탄약)의 포장 및 수송 보관, 드럼통 수리 등과 관련한 수요가 활발해졌다. 또한 하역작업 등 항만 관계 서비스업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작전용 지도와 전단의 인쇄, 항공사진의 복제 서비스,

전선을 향한 방송 서비스 등도 달리 계약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수요의 급증이 이른바 '조선특수'를 낳게 했던 것이다.

후방기지는 그 다양한 역할 가운데 전투행위에 직접 관련되는 보급 훈련기지의 역할보다는 휴양과 위안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기지 주변에는 환락가가 형성되었다. 물론 이러한 위안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미군이 공인한 휴양시설이 기지 주변의 민간인 부지에 RR센터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미군기지는 전투기지이자 동시에 '귀휴(歸休)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의 일본 국민은 이러한 '기지촌'화의 문제를 통해 미군기지를 피부로 느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기지'라는 현실이 일본이라는 국가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강화 독립의 과정은 '기지 일본'이라는 국민정체성(내셔널 아이덴티티) 형성의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지국가화'의 현실과 현상을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어법으로 표현하면 '기지화'는 '잇달아 전개되는 관성(つぎつぎとなっていくきはい)'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전후 일본의 '집요저음(執拗低音, basso ostinato)'이었다.⁴

결국 일본은 미국의 전쟁전략이라는 순수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전쟁 전 기간을 통틀어 중계기지에서부터 주력기지, 그리고 일부 후방 전투구역에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유엔이 참전을 결정한 최초의 전쟁이었으며, 처음으로 제트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인 전쟁이었다. 또 철두철미한 후방지원의 전쟁(a war of logistics)이었다. 미국의 공식 전사는 한국전쟁에 대해 '미국이 수행한 전쟁 가운데 군수

3 林茂夫·畑穰, 『1970年と日本の軍事基地』, 新日本出版社, 1969年, 25頁.

4 大澤真幸, 『戦後の思想空間』(筑摩新書, 1998年, 82-83頁)의 용어법에서 시사 받음.

물자의 동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강조된 전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수행한 '후방지원의 요새(a logistic fortress)'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렇듯 전쟁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면서 전쟁에 관한 협력의 내용도 변화했다. 전투부대와 전투원을 내보내어 직접 전투행위에 참가하여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후방지원 협력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따라서 중요해졌으며, 한국전쟁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한국전쟁에서 일본의 존재는 거의 전투의 향방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은 '전투기지'이자 '생산기지'였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의 산업계에 '특별수요'라는 새로운 시장과 세계적인 비축물자 매입에 힘입은 수출시장 확대를 가져다주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산업계는 심각한 디플레이션하에 누적되어 왔던 체화(滞貨)를 상당량 처리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과 물가가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른바 '동란 붐(특수 붐)'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무기산업의 부활과 이를 매개로 한 미일 간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는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영향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일본의 제계에서 한국전쟁 발발은 '천우(天佑)'였다. 이른바 '조선특수'는 객관적인 수치에 나타나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현장에서 실무 경제를 지휘하는 경영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노동자들은 혁명을 부르짖기보다는 벌이가 좋은 일자리에 만족하며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쪽을 선택했다. 한편 정전이 가시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정전의 전망과 그것이 미칠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특별수요'의 소멸에 따른 타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에 분주했다.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전쟁 기간에 일본이 수행한 전쟁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기지국가'의 유엔협력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으며, 전쟁협력의 새로운 내용과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전선에서의 전투행위를 제외하고, 후방지원의 모든 방면에서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고 있었다. 해상 수송에 동원된 선원과 부두 노동자를 비롯한 일본 적십자사 간호사의 동원, 그리고 해상보안청 소속의 소해정 대원의 한국수역 파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본의 소해작업 참가는 특기할 만한 것이다. 소해작업 개시일인 1950년 10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연 44척의 소해정과 10척의 순시선으로 구성된 '일본 특별소해대'가 원산, 군산, 인천, 해주, 진남포 등의 연안에서 연 327km에 달하는 수로(水路)의 소해작업에 종사하여 607km²의 안전수역을 확보했으며, 27개의 기뢰를 처분했다. 소해작전에 동원된 인원은 당시 모두 공무원 신분이었으며, 현지에서 소해작업에 종사한 인원이 연 1,200명(이 가운데 구 해군 사관급은 50명), 일본 국내에서 연락·보급·수리 작업에 종사한 인원이 연 250명(이 가운데 구 해군 사관급은 42명)으로, 모두 합쳐 연인원 1,450명이 동원된 준 군사작전이었다.⁵

일본 정부의 유엔협력 방침은 단기적으로는 조기 강화의 실현에 목표를 둔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강화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발언력 획득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정전회담 이후에 설치될 한

5 大久保武雄, 『海鳴りの日々—かくされた戦後史の断片』, 海洋問題研究会, 1978年, 259-260頁.

반도 문제 처리를 위한 정치회담에 참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이러한 자리에서 독자적인 발언의 획득을 모색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대미 전쟁협력 방침은 이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었다.

3) '기지국가' 해체 시도: '국방국가'의 재건과 '무장투쟁'의 실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부는 법무부(法務府) 산하의 특별심사국(이하 특심국)을 통해 구 군인 및 우익들의 움직임에 주시하며 이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특심국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 우익 및 군인들은 한국전쟁의 발발이 대일본제국 부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구 군인 장교급 간부 가운데 일부에서는 갓 출발한 경찰예비대(National Police Reserve)가 정규 군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참가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이 강력히 표출되었다. 이들의 의견에서 '기지국가'의 문지기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자존심과 정규 일본국 군대 창설에 대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의 언동은 군사력과 교전권을 포기한 전후 헌법이 공표된 지 이미 4년이 지났는데도 '자국의 안전은 자국의 군대로'라는 전통적인 국방국가의 사상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의 실천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세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정치세력화하여 '기지국가'를 해체하고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국방국가' 창출을 위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로 부활하여 공공연한 활동을 개시한 이들 구 우익 및 군인들은 1951년 가을의 대규모 추방 해제를 계기로 재결집 움직임을 가시화하여, 강화조약 체결 논쟁과 동시에 등장한 안보 및 재군비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러한 논쟁을 이끌어 가기 위한 조직동원에 나서고 있었다.

이른바 '레드 퍼지(red purge, 빨갱이 추방)'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시된 추방 해제는 역코스(reversed course)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950년 10월에 이미 1만 명 규모의 추방 해제가 실시된 바 있으나, 이후 1951년 연말까지 21만여 명의 공직 추방자 중 그 대부분인 20만 1,507명이 추방 해제되어 복귀하게 되었다.⁶ 이들 추방 해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후 우익'은 '반공발도대(反共拔刀隊)' 결성 등의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과격한 반공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공 행동대의 조직화 움직임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연동하여 선명하고 적극적인 대미 투쟁 노선을 채택했던 좌익을 자극하여 조직화를 가속시켰고, 이들에게 무장 투쟁의 명분을 제공했다.

한편 일본공산당은 한국전쟁의 후방기지 일본에서 '기지국가'화에 저항하며 절망적인 대미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는 전후 직후 일본공산당이 내건 '평화혁명론'으로부터 급격히 선회하는 것이어서 커다란 혼란 속에서 전개되었다. 전후 재건된 일본공산당 신노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을 '해방군'으로 규정하고, 혁명은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선거와 의회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는 '평화혁명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련이 대미협력의 태도를 유지하는 한 일본공산당의 '평화혁명' 노선은 소련의 세계정책과 모순되지 않고 유효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 1월을 전후하여 스탈린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크게 전환했다. 중국공산당을 중국 대륙의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하고, 마오쩌둥의 중국과 외교관계를 새로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스탈린은 미소 협조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알타 방식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스탈린

6 堀幸雄, 『増補 戦後の右翼勢力』, 勁草書房, 1997年, 14頁.

의 적극적인 정책은 일본에서 먼저 실행에 옮겨졌다. 갑자기 스탈린은 그동안 양해해 왔던 일본공산당의 평화혁명 노선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나섰다.

1월 6일 코민포름 기관지 『영구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For Lasting Peace, For People's Democracy!)』에 옵서버 명의로 「일본의 정세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초중량급 폭격기가 하루에 3,500회나 출격할 수 있는' 비행기지가 오키나와만 해도 25개가 있으며, 나아가 일본 전국을 '미국의 군사모험 주요 기지,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현재 노사가 산조(野坂參三)의 '평화혁명론'은 '일본의 제국주의 점령자를 미화하는 이론이자 아메리카 제국주의를 칭송하는 이론이며, 일본 인민 대중을 기만하는 이론'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현 조건에서 일본의 근로 대중은 명확한 행동강령을 가지고, 미국에 대한 결정적인 투쟁에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탈린은 기존 방침에서 돌변하여 일본공산당에 철저한 대미투쟁을 요구했던 것이다.⁷

「코민포름 비판」 이후 일본공산당 중앙은 분열되었다. 당중앙의 사태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분열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 사이에 당의 최고위 간부들은 베이징(北京)에서 지도부를 재건, 일본 국내의 혁명운동을 베이징의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와 노사가가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원격조정하고 있었다. 1951년 들어 일본공산당은 2월 23일부터 사흘간 비합법적으로 제4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중핵자위대, 평화옹호투사단, 애국투사단 등의 조직을 결성했다. 그리고 유격대 투쟁을 전개할 것과 이러한 유격대 투쟁과 노동운동을 결

합시킬 것을 주장하는 군사 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현실주의 노선에 대한 공산당으로서의 현실주의적 대응이었다. 일본공산당은 그해 9월 8일의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 조인을 계기로 대미투쟁을 격화시키는 가운데 10월 16일부터 이틀간 제5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른바 '51년 강령(신강령)'을 채택했다. 강령은 요시다(吉田) 자유당 정부의 타도를 목표로 한 '민족해방 민주혁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하여, 그 수단으로서 '폭력혁명'을 주장했다.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선) 해산 후 비합법 활동 이외의 활동 공간을 가져보지 못했던 재일조선인들은 일본공산당의 방향전환과 군사 방침 채택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재일조선인들에게 한국전쟁은 그 자신들의 전쟁이었으며, 조국 존망의 위기였다. 특히 재일조선인 공산당원들에게 운동의 목표가 '일본혁명'에 있는지 '조국방위'에 있는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직면한 물음은 행동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이었으며 그들에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부 재일조선인 운동의 과격한 행동주의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그들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이 공산당원이라는 존재 이유로 본다면 그러한 오류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애초부터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행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한국-조선인 차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조선인 배척과 조선인 무시라는 양 극단에 빠지는 일 없이,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재일조선인들이 담당하고자 했던 적극적인 역할을 가감 없이 평가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치국가' 일본의 해체는 개인적으로는 생존권을 확보하고, 민족적으로는 조국을 방위하고, 계급적으로는 일본 인민을 해방시키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7 大嶽秀夫(編・解説), 『戦後日本防衛問題』第1巻, 373頁.

4) '기지국가'의 평화

일본에서 이른바 '전후' 시대는 '사상'의 시대였으며, '지식인'의 시대였다. 일본의 동서에 산재하고 사상적으로도 편차가 컸던 '전후 지식인'들의 중심에서 이들을 묶어 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던 것이 '평화문제담화회(이하 담화회)'였다. 지식인이란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소유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여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는 철인왕들이며, 이들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소규모 집단으로 존재한다. 지식인들은 이른바 '성직자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⁸ 담화회는 이러한 의미의 성직자 집단이었다.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 논의는 헌법 제9조 문제에 저촉하여 '신학' 논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왔다.⁹ 그러한 신학 논쟁의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 성직자 집단으로서의 담화회였던 것이다. 그리고 담화회라는 성직자 집단의 성전으로서 '전후 평화주의'가 내용을 갖추고 이것이 안보정책과 헌법 사이에서 '신학'적 해석의 기준이 되기에 이르는 데에는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사제'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컸다. 그는 담화회 내부에 잠재한 친구 세대 간 갈등 및 다양한 소집단 간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며, 이들 간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찾아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의 원형을 만들었다.

이들 사이에 최대공약수가 되었던 것은 전전에 지식인 집단이 각개

8 Julien Benda (trans. Richard Aldington), *The Treason of the Intellectuals*, London: Norton, 1980, (1928: rpt., New York: Norton, 1969), p. 43 [ジュリアン・バンダ(宇京頼三[訳]), 『知識人の裏切り』, ボイエーシス叢書 5, 未来社, 1990, 146-147頁], エドワード・W・サイード(大橋洋一[訳]), 『知識人とは何か』(平凡社, 1995年), 25頁에서 재인용.

9 田中明彦, 『安全保障』, 読売新聞社, 1998年, 1-6頁.

격과당함으로써 군부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회한'의 감정이었다. 마루야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화회는 '회한공동체'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절대평화주의'는 그들 사이의 최소공배수가 되었다. 담화회는 '몸에 철 조각 하나 걸치지 않고 검곡의 수풀 속으로 들어간다'는 절대평화주의 사상을 채택했고, 이것이 이후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담화회의 「제2성명」은 “강화가 진실된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이 함께 완전한 것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가령 명목은 강화라고 해도 실질은 오히려 새로운 전쟁의 위기를 증대시킨다”는 인식 하에 “강화는 필연적으로 전면강화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는 “우리 헌법의 평화적 정신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다면, 국제정국이 동요하는 대로 흔들리는 수동적인 태도로 강화 문제에 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 두 세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요구되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결어에서 담화회로서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머물고 말았다. 결어에서는 전면강화를 요구하며 중립 불가침을 회고하고, 유엔가입을 요망하며 기지에 반대한다는 네 가지 입장을 천명했다.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에 대한 일반의 인식 속에서 「제2성명」이 그리 큰 주목을 받아 오지 못한 점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제2성명」은 「제3성명」, 즉 「세 번 다시 평화에 대하여」와 달리 기지반대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히 내걸고 있었다. 그러나 「제3성명」에서는 기지화의 문제가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추상적인 차원에서 처리되었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실제로 일본의 '기지국가'화가 현실이 되

어 버렸다는 사실이 그들의 행동과 사유의 폭을 제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3성명」은 그 후 일본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의 이념적·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 의의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성명의 현실인식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예컨대 ‘두 세계’는 아직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일본은 아직 그 어느 한쪽에도 속해 있지 않았으며 선택이 강요된다 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두 세계’는 결정적으로 갈라졌으며, 일본은 이미 그 가운데 하나의 진영 속에서 ‘기지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쟁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한 형태, 즉 ‘기지국가’로서의 전쟁 수행 방식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을 뿐 일본은 전투행위라는 구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역시 전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담화회 「제3성명」의 현실인식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결함은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명서에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명을 내기까지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국전쟁과 관련한 정세인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부터 판단하건대 토론 참가자들은 당연히 한국전쟁이 몰고 온 변화된 새로운 현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현실의 (기지) 문제가 추상론으로 처리된 것은 전략적 사고가 작용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부서져 사라지기보다는 당분간 직접 대결을 회피하면서 미래에서의 맞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씨앗과 터를 온존한다는 전략도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현

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한편으로는 전후 평화주의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최대강령주의’의 유토피아적 평화주의에 머물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¹⁰ 그러나 그 비판은 상황 논리였던 「제3성명」의 평화주의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평화주의로 해석하고, 도그마화를 진행시켜 온 후세대의 평화운동 측에 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는 최초의 임무를 다한 그 어느 시점 또는 단계에서 이러한 ‘의도적 결함’을 매우고, 개정판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이를 회피한 채 이대로 나간다면 일본의 평화주의는 ‘화석으로서의 생존’에 불과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전쟁의 발발에 직면하여 일본의 각 신문이 사설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제시한 논리는 ‘피전(避戰)’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히 전쟁 발발과 함께 가장 직접적으로 전쟁의 영향을 받았던 규슈의 지방지 『니시닛폰신문(西日本新聞)』의 사설에서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나 개전으로부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신문에서 한국전쟁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정면에서 다루는 논설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특별수요와 같이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 또는 일본 국민이 취해야 할 입장의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일반 국민에게 ‘강 건너 불’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강화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독자적인 특파원을 한국 전선에 파견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전쟁은 바

10 和田春樹, 『朝鮮戦争』, 岩波書店, 1995年, 235-239頁.

로 ‘일본의 전쟁’이었다.

한국전쟁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바, 일본 국민 일반은 ‘경무장, 기지제공의 미일안보’로 요약되는 요시다 정부의 현실주의적 안보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대다수 국민은 ‘국방국가’도 ‘무장투쟁’도 거부하였고, ‘기지국가’를 현실로서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2. 현재적 함의

1) 2012년 겨울에서 2013년 여름으로

2012년 12월에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정원 480명 중 294석을 얻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헌법개정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みんなの党)의 의석수를 합칠 경우 개헌 발의가 가능한 2/3 의석을 넘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서 2013년 여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다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이 대승했다. 반면 자민당에 대항할 민주당은 참패하여 다른 꼬마 야당들과 비슷한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2012년 겨울에서 2013년 여름에 이르는 반년 사이에 일본 정치에서 일강다약(一強多弱) 구조가 출현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국민은 절묘한 균형 감각을 발휘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이 가능한 71석에서는 6석이 모자란 65석을 차지했고, 공명당(公明党)과 함께 연립 여당의 과반에 만족해야 했다. 게다가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2/3 의석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참의원에서의 개헌 발의는 어렵게 되었다.

일본 국민은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허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낮은 투표율은 일본 국민의 균형 감각이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주장하는 제9조의 평화 조항 개정 반대하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도 개헌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의원들이 있어 아베 수상이 참의원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개헌 정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빗나간 것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베 수상이 개헌이라는 과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아베 수상은 2014년 7월 1일 각의(閣議)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래 위헌이라 해석되어 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석을 확정했다. 이어서 아베 수상은 2015년 4월 말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의 준비를 약속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15일 일본 국민의 다수가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제’의 중의원 상정을 강행 채택하고, 이어서 16일 중의원에서 이를 가결시켰다. 나아가 9월 19일에는 참의원에서도 안보관련법들이 가결되어 성립했다. 특징적인 것은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일본의 대중 매체에는 아베 수상의 선택과 강경한 행보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평화주의의 감성이 대중 매체 일반을 지배하던 과거와는 다른 풍경이다.

2012년 연말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헌에 대한 신념이 유난히 강한 아베 수상의 등장에만 기인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국가의 군대, 즉 국방군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평화헌

법하에서 전개되어 온 전후 일본의 국가 그 자체가 근대국가의 상식에서 볼 때는 불완전한 것이며, 영토성과 폭력성을 핵심 속성인 근대국가의 맨살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최근의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국민이 이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전후 국가, 그것이 바로 '기지국가'였다.

아베 수상이 주장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후체제(戦後レジーム)"로부터의 탈각'이 일본 국민에게 먹혀들어 가는 것은 '평화국가'의 유효 기간이 끝나 가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에 퍼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¹¹ 서장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평화국가'였다는 인식은 오랫동안 일본의 좌와 우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의 이상을 존중하고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기에 일본의 성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냉전기의 일본에 대해 말하자면 옳아 보인다. 반면 탈냉전 이후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저하를 '평화국가' 외교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는 일본인들은 '평화국가'의 부정적인 유산에 주목한다.

어쨌든 좌우를 막론하고 일본인에게 전후 일본은 '평화국가'인 것이다. 한편이 '평화국가'를 계승해야 할 자산으로 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은 그것을 부정해야 할 유산으로 보고 있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듭 말하지만 일본인에게 전후 국가는 '평화국가'로 존재해 왔다. 과연 이러한 인식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11 아베 수상의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大下英治, 「安倍晋三, スペシャルインタビュー, 安倍晋三が語る日本の課題と将来, 真の保守とは」, 『安倍晋三と岸信介』, 角川新書, 2013年, 16-50頁.

2) 『코쿠리코 언덕에서』: '전후사'의 은유

2011년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코쿠리코 언덕에서(コクリコ坂から)』는 1960년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소년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이야기의 배경과 설정에서 일본 전후사에 각인되어 있는 한국전쟁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은 여주인공인 소녀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과 관련된 모종의 해상 활동에서 희생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한일관계에 까지 확대 적용한 것 같아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 전개이지만, 제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의도는 다른 데 있어 보인다. 그의 진의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일본 전후사에 각인되어 있는 한국전쟁을 소환함으로써 평화헌법을 내세운 '전후' 일본이 결코 '전쟁'의 현실에서 비켜 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는 21세기 초 동아시아의 현실에 대한 나름의 의견 제시인 듯하다. 마침 21기에 들어 동아시아에서는 영토성과 폭력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근대국가의 맨살이 드러나고 있으며, '전쟁과 국가'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근대국가는 전쟁 속에서 태어났다. 국가는 전쟁의 부산물이면서 전쟁의 주체로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동원체제로 스스로를 최적화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이 목표로 삼았던 '고도국방국가'는 그 극단적 표현이었다.¹² '고도국방국가'는 패전 후 연

12 '고도국방국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川西正鑑, 『東亜地政学の構想』, 実業之日

합국에 의한 점령 개혁을 거치면서 해체되었고, 신헌법 제정을 계기로 일본은 전쟁과 군비를 부인하는 '평화국가'로 거듭났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미군기지와 생산시설이 전쟁의 현실에 깊숙이 말려들어 갔고, 일본은 '평화국가'의 이상과는 괴리된 '기지국가'의 현실을 수용하고 강화와 독립을 달성하게 되었다. '기지국가'의 모습으로 변형된 전후 국가 또한 '전후의 전쟁들'에 대응하여 형성된 자원동원체제의 기본 속성을 내재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코쿠리코 언덕' 위에서 먼바다를 내다보는 소녀의 아버지는 이를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일부 정치인들이 '전후의 탈각'을 대놓고 외치기 시작한 일본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를 던지시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전후'의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였는가? 일본에서 '전후'는 포츠담선언 수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7월 26일 미영중 3국의 공동선언으로 제시된 포츠담선언에는 군대의 무조건 항복과 민주화, 전범 처벌 등이 항복의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일단 이를 무시했던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와 소련의 참전을 계기로 포츠담선언의 수락을 결정 통보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게 되는데, 포츠담선언에 제시된 두 가지 목표가 일본점령 개혁의 중심축이 되었다.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와 민주화(democrat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2D정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연합국 정부의 점령하 개혁 정책을 통해 일본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전후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1946년 11월 3일에 공포,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전후 헌법이었다. 대

표적 '전후 지식인'인 마루야마 마사오가 전후 헌법을 읽고 '전전(戰前)'과의 단절을 체감했다고 한 것처럼, 많은 일본인이 전후 헌법의 탄생에서 비로소 '전후'의 시대가 새로 열린 것을 실감했다.

전후 헌법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1장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상징천황제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제2장 제9조의 전쟁포기 조항이었다. 상징천황제 조항에서 메이지 천황의 권위는 부정되었다. 천황은 실제적 권력을 갖지 못하고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의 존재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지위는 주권을 지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천황의 전쟁책임을 엄격히 물으라고 요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었다. 천황의 존재가 군국주의의 부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 전쟁포기 조항이었던 것이다. 일본국 헌법 제9조는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일본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군사력'을 보유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 2개항이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 되는 것이며, '평화국가' 일본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현실을 목전에 두고 '평화국가' 일본의 존립이 위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은 '기지국가'로 재탄생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그 자체는 '통일도 없고, 전쟁도 없는' 애매한 형태로 종결되었으며, 그것이 '기지국가'라는 어정쩡한 형태로 일본이 전후사를 헤쳐 나오고 있는 전제가 되었다.

3) 전후의 전쟁들(post-war wars)과 '기지국가' 일본

베트남전쟁은 '기지국가' 일본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사건이었다. 일본 국민의 재군비에 대한 거부반응은 1960년 안보투쟁을 거치면서 재확인되었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조직적으로 분출된 안보투쟁에도 불구하고 미일안보조약은 개정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를 강행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수상은 퇴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헌법개정과 재군비는 저지되었다. 기시에 이어 등장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은 1960년 10월 수상 취임 후 처음 가진 시정 방침 연설에서, 개헌 논쟁은 '본래 문제의 본질이 국민 각층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상당한 세월을 거치면서 국민 여론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향을 향해 성숙할 때 비로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의 헌법개정 포기 선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1960년 안보투쟁은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일본 국민이 '기지국가' 일본의 현실과 직면하게 만들었다.

1965년 2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에 전면적 폭격을 개시하자 사토(佐藤) 내각은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 하여 이해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안보조약의 형식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본토의 미군기지를 베트남전쟁의 후방기지로서 미국에 제공했다.¹³ 4월 14일에는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이 안보조약 상의 '극동'의 범위에 대해 재해석함으로써 사토 내각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1960년에 개정된 안

보조약의 '극동 조항'이 베트남전쟁에서 현실화한 것이다. '북폭(북베트남 폭격)' 이후 오키나와는 물론 요코스카(横須賀)와 이와쿠니(岩國) 등의 미군 기지가 베트남전쟁으로 향하는 항모와 폭격기의 출격기지로 변모했으며, 사가미(相模) 보급창은 수리 및 조달 기지가 되었다. 오지(王子)와 네리마(練馬)의 미군 병원은 야전병원이 되었으며, 베트남전쟁 특별수요가 창출되기도 했다.¹⁴ 이 모든 것이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북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1965년 8월 24일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북폭'에 찬성하는 국민이 겨우 4%에 불과했고, 75%의 국민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당연히 미국의 기지가 되어 베트남전쟁에 협력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베평련)'이 전개한 반전운동은 광범위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¹⁵ 그러나 국민 일반은 현실적이었다. 이번에도 일본 국민은 '기지국가'의 현실을 추인했다.

신문 논조가 '확전 반대'(특히 『마이니치신문』)를 주된 기조로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은 미일안보조약에서 약속한 기지제공의 현실과 전후 헌법하에서 자위대의 현상유지를 지지했다. 1969년과 1972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1%가 '현상을 유지하여 미일안보체제와 자위대로 일본의 안전을 지킨다'는 수단을 지지하고 있다.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1969년에 13%였다가 1972년에는 11%로 줄어든 반면 '안보조약을 해소하고 자위대도 축소 또는 폐

14 「ベトナム戦争と日本の基地(日本の潮, 2)」, 『世界』, 1967년 6월, 190頁.

15 이하 베트남전쟁과 일본에서의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남기정, 「베트남 '반전탈주' 미군병사와 일본의 시민운동: 생활세계의 전쟁과 평화」, 『일본학연구』 36, 2012.

13 『朝日新聞』(1965. 8. 8); 白井洋子, 「日本のなかのベトナム戦争—月刊紙『世界』からの概観」, 『応用社会学研究』 17号, 2007년 2월, 7頁.

지하자'는 주장은 1969년에 10%에서 1972년에는 16%로 증가하고 있다. 즉, '기지국가'를 해체하자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여전히 소수 의견이며, 그중 '기지국가 해체 이후 자주적 국방국가로의 변화'를 지지하는 국민은 더욱 감소하고, '미군에 대한 기지제공도 자위대도 필요 없다'는 '절대평화주의'의 입장은 근소하나마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 반전운동의 미약한 성과였다. 그동안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고, 본토에서 미군기지가 축소된 만큼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가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기지국가'의 속성이 '기지의 섬'에 집중하여 표현되기 시작했다.

냉전이 붕괴되고 미일안보조약이 재조정의 운명에 처해질 즈음인 1990년 동아시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걸프전쟁은 일본의 미군기지가 여전히 전쟁의 후방기지로서 유용함을 보여 주었다. 걸프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중동을 향한 출격·중계·보급 기지가 되었다. 오키나와의 가테나(嘉手納), 후텐마(普天間), 그리고 본토의 이와쿠니(岩国) 등에서는 항공부대가 출격했으며, 요코스카와 사세보(佐世保) 등의 해군기지에서는 제7함대 소속 함정들이 추격해 나갔다.

미군의 출격은 지역적으로 주일미군의 동원을 극동의 안전보장에 한정된 '극동조향'에 위배되는 내용이었지만, 일본 국회에서는 외무성 조약국장이 '주일 함대가 출동하는 것은 전투작전 행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다'는 궤변으로 이를 용인했다. 걸프전쟁을 계기로 주일미군은 일본의 기지로부터 어디로든 출격이 가능한 태세가 만들어졌다.¹⁶ 나아가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수상은 담화를 발표하여 다국적

군의 투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해 자위대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평화협력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다. 그 대신 일본은 다국적군에 대해 13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했다. 이를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매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피를 흘리지 않는 이기적인 국가', '평화에 대한 무임승차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본에 각인되었다.

한편 1990년대 초는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이 회자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의 '불바다' 발언으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한반도에서 '통일도 없고 전쟁도 없다'는 '기지국가' 외교의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보통국가론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이후 일련의 법안 정비를 거쳐 1999년에는 주변사태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와 이에 이은 미국의 아프간전쟁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자위대의 해외파견'이라는 형태로 일선을 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9월 11일 심야에 일본 정부는 국제긴급원조대를 편성하고 국내 미군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를 지시했다. 아프간전쟁이 개시된 후에는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의 적극적인 공헌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군의 지원협력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자위대를 파견했다.

10월 5일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8일에 중의원, 29일에 참의원을 통과해서 가결되었다. 이어서 11월 9일에는 이지스

16 佐藤裕二, 「湾岸戦争と在日米軍基地—日米安保体制の変容」, 『日本の科学者』 26卷

8号, 1991年, 13-14頁.

함을 포함한 자위대 함정이 인도양을 향해 사세보에서 출항했다. 이 모든 과정이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11월 25일에는 추가로 자위대 함정 3척이 사세보를 출항했으며, 전체적으로 1,200명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¹⁷ 이는 '기지국가' 이후 미일안보조약 아래 진행되어 온 현실이 기정사실로 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걸프전쟁 이후 '유사법제(有事法制)'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때마침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맞물리면서 일본에서는 안보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고이즈미(小泉) 내각의 자위대 파견 결정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9.11 직후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일본 여론에 변화가 나타났다. <TV 아사히>의 '뉴스 스테이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주도의 아프간 보복 공격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일본의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지지하는 여론을 웃돌기 시작한 것이다.¹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 직후인 10월 13/14일에 실시된 <TV 아사히>의 조사에서는 공격에 대한 '지지'가 51%, '지지하지 않음'이 37%, 자위대 파견에 대한 '지지'가 55%, '지지하지 않음'이 35%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1월 17/18일의 여론조사에서는 '영미의 군사공격'에 대해 '지지'가 40%, '지지하지 않음'이 47%로 역전되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인도양 파견'에 대

해서도 '지지하지 않음'이 53%인 데 반해 '지지'가 38%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국민은 '기지국가'의 효용한계를 실감하는 한편 자위대가 '기지'의 방위를 넘어선 활동에 참가하여 군사적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저항감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4) '기지국가'에서 '정상국가'로: '헌법개정'의 향방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쟁을 '세계 내전'이라 명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이 있었다.¹⁹ '세계 내전'의 시대에 '기지국가'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감지되었다. '세계 내전'의 시대에는 '극동'의 지정학적 구분도 전선과 후방의 군사작전상의 구분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기지국가'로부터의 탈각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는 구호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 이즈음이었다.

이 상황에서 표출된 일본 국민의 여론은 양가적이다. 우선 일본 국민 사이에는 2000년대에 들어 '자위대와 방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는 국민은 걸프전쟁 시기를 예외로 하면 50~60%에서 점증하고 있었다. 2000년 이후부터 오름세가 뚜렷해졌으며 2003년 이후에는 60%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었다.²⁰ 이러한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주방위'보다는 '미일안보와 자위대'에의 의지를 최선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17 『朝日新聞』(2001. 11. 26).

18 加藤哲郎, 「現代日本社会における『平和』—情報戦時代の国境を越えた『非戦』」, 『歴史学研究』769号, 2002年 11月, 35頁; 『ニュース・ステーション世論調査』, <http://www.tv-asahi.co.jp/nstation/research/researchs.html>(최종 검색일: 2013. 12. 12)

19 土佐弘之, 「脱領土的テロリズム, ポストモダン帝国体系と世界内戦」, 『現代思想』29(13), 2001年 10月, 451-455頁.

20 『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 『月刊世論調査』, 2006年 9月, 3頁.

다. '자주방위'를 선택한 국민이 10% 내외에서 평행하고 있는 데 비해 '미일안보와 자위대'의 현상유지를 선택한 국민은 2000년대 들어 70%를 넘어지고 있었다.²¹ 즉, 방위정책에 관한 한 현행 헌법하의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 사이에서 헌법개정론이 호헌(護憲) 여론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NHK 조사를 들 수 있는데, 1992년부터 10년 만인 200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헌법개정 찬성론자가 반대론자를 앞선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 '필요 없다'는 응답이 52%로 방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평화헌법의 유용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²

2013년의 조사는 더욱 복잡하다. 개정 찬성론자(약 40%)가 반대론자(약 20%)보다 2배 많은 결과를 보였으며, 제9조의 개정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33%, 반대 의견이 30%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이제 헌법개정을 통한 군대 보유에 대해 일본 국민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는 미묘하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가 45%, 찬성이 20%로 나타나 헌법개정이 곧바로 본격적인 군대 보유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아님을 알 수 있다.²³

최근 논란이 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찬반 여론은 더욱 이러한 경향을 농후하게 보여 준다. 2013년 8월에 실시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27%인 반면 59%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었다. 아베 내각 지지층 중에서도 37%가 찬성, 49%가 반대하고 있었다. 일본이 현행 헌법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데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²⁴

5) 동아시아적 문제로서의 일본의 '정상국가화'

이처럼 전후 동아시아에는 미소 간에 전개되는 지구적 냉전체제하에 '한국전쟁 휴전체제'라고 하는 지역 수준의 준전시체제가 형성되어 있었고, 일본은 '기치국가'가 되어 '동아시아 휴전체제'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동아시아 휴전체제'란 '한국과 북한을 전위로 한 미국-일본-한국과 소련-중국-북한 사이의 집단적 대결 상태 속에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승리를 담보해 내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⁵

냉전은 분명 전쟁은 아니었지만, 휴전 또한 전쟁이 아닌 상태였으며, 또한 동시에 휴전은 냉전도 아닌 상태였다. 결국 한국전쟁과 그 종결과

21 「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 『月刊世論調査』, 2006年 9月, 68頁.

22 <http://www.nhk.or.jp/bunken/summary/yoron/social/pdf/020501.pdf>(최종 검색일: 2013. 12. 12)

23 <http://www.nhk.or.jp/bunken/summary/yoron/social/pdf/130503.pdf>(최종 검색일: 2013. 12. 12)

24 『朝日新聞』(2013. 8. 26);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825/TKY201308250232.html>(최종 검색일: 2013. 12. 12)

25 남기정, 「동아시아 냉전체제하 냉전국가의 탄생과 변형」, 『세계정치』 26호, 2005. 참고로 박명림은 '한반도 정전체제'라는 개념으로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기본구조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개념은 한국전쟁의 종결로 산생된 '한국전쟁 이후 체제(the post-Korean War system)'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박명림, 「한반도 정전체제: 등장, 구조, 특성, 변환」,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1호, 2006(봄).

정을 통해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는 휴전체제로 전화되었으며, 그 위에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미소 간의 냉전체제가 덧씌워진 상태였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는 그 이면에 한국전쟁 휴전체제를 숨겨 놓고 있었다. 지구적 차원의 냉전체제가 전개되는 동안 휴전체제는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냉전체제의 하위체제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냉전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전면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냉전체제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지구적 차원의 규정력이라면 휴전체제는 지역적 차원의 규정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지국가'는 이러한 휴전체제에 조응하여 일본에서 형성된 국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코쿠리코 언덕에서' 1963년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는 소년 소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 속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러한 일본의 현실을 녹여 배치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총력전 체제를 갖추고 '고도국방국가'가 되어 있던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하에서 '평화국가'로의 재기를 다짐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기지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전후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계승되어야 할 자산이거나 부정되어야 할 유산으로 자리 잡은 평화국가의 실상은 기지국가였던 것이다. 일본에서 '정상국가'화 논의가 대두된 1990년대는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이면에서 동아시아의 휴전체제가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본의 개헌 논의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과의 마주대하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기지국가'의 '정상국가'화는 '휴전협정체제'의 '강화조약체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진행되는 역사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휴전협정체제'의 온존 속에서 진행되는 '정상국가'화는 '기지국가'의 모순을 해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을 격화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전후 '평화국가'로의 재기를 시도했던 일본이 다시 '전쟁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기지국가'의 역할을 감수하며 멈추어 섰던 것은 '휴전협정체제'의 제도화를 통해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감추어진 제동장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의 전사 연구자 사사키 류지(佐々木隆爾)는 1951년 미국동군 사령부가 경찰예비대를 '한국전쟁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미 지상군과 같은 수준으로 육성하여, 새로 6개 사단을 추가함과 동시에 이를 한국의 전선에 투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일본이 후방지원에서 나아가 '전방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제17의 참전국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⁶ 일본 국내에서는 정계에 복귀한 우익들은 물론 구 군인들과 보수적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까지도 재군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장기화하면서는 국민의 의식도 서서히 재군비 우세로 돌아서는 듯했다. 일본 내외의 압력 속에 일본은 다시 '전쟁국가'의 입구에 서 있었던 것이다.

물론 1951년 3월 1일 미국무성이 미국동군 사령부의 제안을 거부하여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본이 스스로 재군비를 하고 이른바 보통의 국가가 되었다면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쟁은 더 오랫동안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참전으로 한미일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발언력은 더욱 커졌을 것이며, 그것도 구 우익과 군인들이 주도하는 것

26 佐々木隆爾, 「前方支援の立場もあり得た日本の後方支援」, 『歴史群像シリーズ, 61号』 朝鮮戦争(下)―中国軍参戦と不毛の対峙戦, Gakken, 1999年, 139頁.

일 수 있다. 그러나 한미일의 주도로 통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낙관론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 발발 이전부터 동아시아에서 부활하고 있던 중일전쟁의 양상으로 보아 길고 긴 중일전쟁의 지속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소일전쟁의 양상까지 겹치면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한 세계전쟁의 발발 가능성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⁷ 그것은 한반도의 초토화를 의미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평화국가’로부터 ‘전쟁국가’로 전락하는 길목에서 ‘기지국가’로 멈추어 섰던 것은 한국전쟁을 휴전으로 종식시키는 숨은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 ‘정상국가’화의 거친 발걸음을 재촉하는 아베 수상의 시도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요란한 구령하에 ‘휴전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종식시키고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그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베 수상의 성공은 일본의 실패이자 동아시아의 실패가 될 수 있다.

27 초기 전투는 소련과 일본의 전쟁 재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의 전술 전법은 소련군이 노몬한 제2차 공세, 폴란드 침공작전 및 만주 침공작전 등에서 취했던 것과 거의 같은 것이었으며, 한국군의 지도부는 일본군 육군사관학교, 만주 군관학교 출신 등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일본군의 전술 전법이 기본이 되어 있었다. 葛原和三, 『北朝鮮軍の侵攻計画』, 『朝鮮戦争』上, 学研, 1999年, 71頁.

참고문헌

1. GHQ/SCAP 자료

- Anti-American Activities*,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4.
- CHOREN: CHOSENJIN RENMEI (Korean League) Book 1 (1949)*,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61-04270.
- CHOREN: CHOSENJIN RENMEI (Korean League) Book 2 (1950)*,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70-04272.
- Communism in Japan*, GS, GHQ/SCAP Records, Box no. 2146, GS(B)-01264-01302.
- Communism in Japan, II*, GS, GHQ/SCAP Records, Box no. 2146, GS(B)-01294.
- Communist Party Book I*, GS, GHQ/SCAP Records, Box no. 2241, GS(A)-02462.
- 'G' Bureau, A-100.23*,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BB, GS(B)-03980.
- Illegal Activities*,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
- Immigration Law*,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
- Impact of Korean War on Japan's Economy*, ESS, GHQ/SCAP Records, Box no. 7589, ESS(C)-09950-51.
- Japan Communist Party: General, A-100*,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AA, GS(B)-03906.
- Japan Communist Party Underground Activities*,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BB, GS(B)-04000-04004.
- Japanese Korean Military Activities*, GS, GHQ/SCAP Records, Box no. 2275 HH, GS(B)-04258.